

2021. 04.17 국가직 9급 행정학개론(나책형) 기출문제 해설

[영역별 출제 비중 및 출제 테마 정리]

출제 영역	비중	출제 테마	
기초이론	4, 20%	- 시장실패원인 - NPM과 뉴거버넌스 비교	- 과학적 관리론 - 신공공서비스론
정책학	3, 15%	T. Lowi 정책유형론	- 비용편익분석 - 외적타당도 저해요인
조직행정	5, 25%	- 조직목표 - 공기업 설립동기와 유형	- Network 조직 - 공공봉사동기 - 동기부여이론
인사행정	2, 10%	공무원의 법률상 의무	근무성적평정 오류
재무행정론	3, 15%	준예산	- 추가경정예산 - 예산과정의 이해
지방행정론	2, 10%	자치권	주민소환제도
행정환류론	1, 5%	행정통제(외부통제)	

(1) 3년간 국가직 9급 시험에서 행정환류론 출제가 없었으나 이번 시험에서 1문항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제된 주제가 환류론에서 출제빈도가 가장 높은 주제이면서 어렵지 않은 주제가 출제되어 수험생에게 부담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2020년 국가직 9급의 경우 변별력을 가리는 난이도 높은 문제가 인사행정편에서 집중되었던 반면 이번 시험은 조직행정의 출제비중이 높고 난도가 높은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행정학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전 범위를 고르게 학습을 할 필요가 있음을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난이도 별 출제 테마 정리]

난이도	비중	출제 테마	
상	2, 10%	공공봉사동기	공기업 설립동기와 유형
중	4, 20%	T. Lowi 정책유형론 - 예산과정의 이해	- 근무성적평정 오류 - 주민소환제도
하	14, 70%	- 시장실패원인 - 신공공서비스론 - 조직목표 - 공무원의 법률상 의무 - 자치권	- 과학적 관리론 - 비용편익분석 - Network 조직 - 준예산 - 행정통제(외부통제) - NPM과 뉴거버넌스 비교 - 외적타당도 저해요인 - 동기부여이론 - 추가경정예산

(1) 난이도 상

① 공공봉사동기에 관한 문제는 인사조직론 7급과 소방간부 시험에 출제된 적 있는 주제로서 이번 문제는 인사조직론 7급 과목에서 출제되었던 문항의 유사 출제에 해당합니다. 해당 내용이 DIET 행정학 2.0 / 3.0 / 4.0 교재에 모두 수록되어 있으나 9급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크게 강조하지는 않았던 내용에 해당합니다. 공공봉사동기이론의 특징과 이론의 대두배경, 기대효과에 관한 문제는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였는 바 옳은 지문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

제이긴 하지만, 해당 문제가 변별력을 가져오는 가장 어려운 문제에 해당합니다.

- ② 공기업의 설립동기와 유형에 관한 문제 역시 DIET 행정학 2.0 교재에 수록된 내용이지만 최근 빈출되는 문제유형과 출제 point의 차이가 있는 문항으로서 시험장에서 수험생에게 낯선 느낌을 줄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2) 난이도 중

- ① T. Lowi 정책유형론 문제는 정답을 가려내는 잘못 배치된 사례를 빠르게 가려낼 수 있는지가 정답을 찾는 수단이 됩니다.
- ② 근무성적평정 오류에 관한 문제는 수업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지만 한 문제에서 여러 내용을 묻고 있어 시험장에서 빠르게 정답을 찾아야 하는 수험생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 ③ 예산과정에 관한 종합적 이해도를 묻는 문항의 경우 여러 제도의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직관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난이도 중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 ④ 주민소환제도의 경우 정답이 되는 주민소환투표청구의 요건에 관하여 강조하고 별도의 문제를 풀어봤지만, 법령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로 판단됩니다.

(3) 난이도 하

그 외 문항은 무난하게 정답을 찾을 수 있고, 정답을 찾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4) 종합적 평가

2020년 국가직 9급 시험이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021년 국가직 9급 시험은 어느 정도 무난하게 출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시험이 변별력이 있어야 하므로 20개의 문제가 모두 평이할 수는 없으며, 일부 난도 높은 문제가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난도 높은 문제가 완전히 생소한 주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관련 주제의 일부 내용을 학습한 것을 바탕으로 정답을 유추해 낼 수 있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번 국가직 9급 시험에서 원점수로 95점 정도의 점수를 받으면 이상적이지만, 여러 과목을 공부해야 하고, 또 제한된 시간 동안 여러 과목의 문제를 동시에 풀어내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을 고려해볼 때 85점 이상이면 행정학에서 받아야 할 점수는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합격 여부는 그 외 공통과목의 점수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직 9급 시험인데....

2020년도 지방직 9급 시험이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그로 인해 후에 치러진 2020년 국가직 9급 시험이 어렵게 출제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돌아오는 2021년 지방직 9급 시험은... 출제의 기준이 될 전년도에 지방직 9급 시험의 통계와 2021년 첫 시험인 국가직 9급 시험의 통계가 모두... 난도 높은 출제를 통한 변별력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번 국가직 시험의 결과에 만족하고 지방직 시험 대비를 다소 소홀히 하거나,

이번 국가직 시험의 출제 수준에서 지방직을 대비할 경우 지방직 시험 결과가 부정적일 수 있으니 지난간 시험은 잊고 다시 준비를 잘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험 응시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부효과 발생 ② 시장의 독점 상태
③ X-비효율성 발생 ④ 시장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존재

|| 정답 || ③

|| 해설 ||

③ X-비효율성은 정부실패의 원인에 해당한다.

2021년 1월 14일 DIET 행정학 5.0 진도별 문제풀이 - 제2회 11번

다음 중 시장실패의 원인으로만 연결된 것은?

- | | | | |
|-----------|----------|------------|----------|
| ㉠ 내부효과 | ㉡ 외부효과 | ㉢ 파생적 외부효과 | ㉣ 내부성 |
| ㉤ 공공재의 존재 | ㉥ 규모의 경제 | ㉦ 지대추구행위 | ㉧ X-비효율성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정답 || ④

|| 해설 ||

[1] 시장실패원인 : ㉡ 외부효과, ㉤ 공공재의 존재, ㉥ 규모의 경제(자연독점)

[2] 정부실패원인 : ㉢ 파생적 외부효과, ㉣ 내부성(사적 목표 설정), ㉦ 권력의 편재와 지대추구행위,
㉧ X-비효율성

[3] 실패 × - ㉠ 내부효과(가격의 정상 작동)

2. 조직목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구성원들이 목표로 인해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해준다.
- ②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를 제공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 ③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밝혀 조직활동의 방향을 제시한다.
- ④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 정답 || ④

|| 해설 ||

- 바로잡기

- ④ 모든 조직은 조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조직목표는 조직이 존재하는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 해설

- ① 조직목표는 공동의 목표 달성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일체감 형성에 기여하며, 목표달성을 위한 동기유발을 자극한다.
- ② 조직목표는 조직의 구조와 과정을 설계하는 기준이 되며, 조직의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이 된다.
- ③ 조직목표는 조직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조직활동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한다.

DIET 행정학 2.0 원리이해 1권 P. 447

2 조직의 개념 이해

(1) 목표지향성

- ① 조직은 조직이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 상태로서 조직 자체의 목표를 가지고 있음
- ② 조직목표는 복수의 목표가 존재하기도 하며, 반드시 구성원의 목표와 일치하지는 않음
- ③ 조직목표와 구성원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것을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됨

(2) 체계화된 구조와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조직은 조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조직 역할을 구분하여 여러 부서에 분담시키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성원 각자의 역할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조직구조를 형성함

3. 결정과 기획 같은 핵심기능만 수행하는 조직을 중심에 놓고 다수의 독립된 조직들을 협력 관계로 묶어 일을 수행하는 조직형태는?

- | | |
|-----------|-----------|
| ① 태스크 포스 | ② 프로젝트 팀 |
| ③ 네트워크 조직 | ④ 매트릭스 조직 |

|| 정답 || ③

|| 해설 ||

- 바로잡기

- ① 태스크 포스(Task Force) : 특정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집되며 과업이 해결된 후에는 해체되는 임시 위원회
- ② 프로젝트 팀(Project Team) : 서로 다른 분야에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소수의 조직구성원들이 공통된 목표 하에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형성하는 조직 형태
→ 프로젝트 팀은 태스크 포스와 같이 집단 사이의 통합을 위한 것이지만, 그 통합이 문제해결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기능의 통합이라는 점이 차이가 있으며 태스크 포스에 비해 장기적 과정을 가짐
- ④ 매트릭스 조직 : 전통적인 기능별 조직과 문제해결을 위한 임시조직이 혼합하여 존재하는 이중구조로서, U형 조직과 M형 조직의 통합 또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을 시도한 조직형태

- 해설

- ③ 네트워크 조직 : 각기 높은 독자성을 지닌 조직단위나 조직들 사이의 협력적 연계장치로 구성된 조직으로서, 중심부는 계획·관리·조정 역할만을 수행하는 공동(空洞)화 조직

DIET 행정학 4.0 기출 All care 1권 P. 601

32 상 중 하

2008 국회8급

A기업이 봉급에 관한 업무는 '갑' 회사에, 광고에 관한 업무는 '을' 회사에, 생산은 '병' 공장에 각각 위탁하고, 전략수립과 판매는 A기업이 직접 담당한다면, 이러한 조직구조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 | |
|-----------|-------------|
| ① 분화된 채널 | ② 모호한 책임 관계 |
| ③ 넓은 직무범위 | ④ 표준운영절차 |
| ⑤ 적은 규칙 | |

해설 전략수립과 판매와 같은 핵심적인 기능은 조직이 수행하며, 여타 기능은 다양한 참여자를 통해 수행하는 네트워크 구조는 가장 유기적인 구조로서 각 참여자는 높은 과정적 자율성(분권화)을 가진다. 이는 높은 공식성(엄격한 표준 운영절차와 많은 규칙)에서 낮은 공식성(유연한 표준운영절차와 적은 규칙)으로의 조직 구조의 변화를 초래한다.

4. 행정부에 대한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
- ㉡ 국회의 국정조사
- ㉢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
- ㉣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 ㉥ 환경운동연합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 ㉦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 ㉧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

- ① ㉠, ㉡, ㉢, ㉣, ㉤ ② ㉡, ㉢, ㉣, ㉤ ③ ㉡, ㉣, ㉤, ㉥ ④ ㉡, ㉣, ㉥, ㉦, ㉧

|| 정답 || ④

|| 해설 ||

- 바로잡기

- ㉠ 행정안전부의 각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 : 내부통제
- ㉢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 예산안 검토 및 조정 : 내부통제
- ㉤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 : 내부통제
- ㉦ 중앙행정기관장의 당해 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 내부통제

- 해설

- ㉡ 국회의 국정조사 : 외부통제
- ㉣ 국민들의 조세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외부통제
- ㉥ 환경운동연합의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 외부통제
- ㉧ 언론의 공무원 부패 보도 : 외부통제

DIET 행정학 4.0 기출 All care 2권 P. 256

17 상·중·하

2019 경찰간부

행정통제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 |
|------------------|------------------|
| ㉠ 사법부에 의한 통제 | ㉡ 교차 기능조직에 의한 통제 |
| ㉢ 시민에 의한 통제 | ㉣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
| ㉤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 ㉥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 외부통제

- ㉠ 사법부에 의한 통제 : 외부·공식적 통제
- ㉢ 시민에 의한 통제 : 외부·비공식적 통제
- ㉤ 옴부즈만에 의한 통제 : 외부·공식적 통제

- 내부통제

- ㉡ 교차 기능조직에 의한 통제 : 내부·공식적 통제
- ㉣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 : 내부·비공식적 통제
- ㉥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 내부·공식적 통제

5.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자치권)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조합도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정답 || ③

|| 해설 ||

- 바로잡기

- ③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해설

- 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현재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형태로 지방공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때,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21년 3월 6일 DIET 행정학 5.0 진도별 문제풀이 - 제22회 5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③ 조례가 규칙에 비해 상위의 효력을 가지므로 조례로 규칙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정답 || ②

|| 해설 ||

- 바로잡기

- ① 지방의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③ 조례가 규칙에 비해 상위의 효력을 가지지만, 조례와 규칙은 형식을 달리하므로 조례로 규칙 대상을, 규칙으로 조례 대상을 대신 규율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기관위임사무와 관치행정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으므로 자치규범인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 해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위반한 행위에 대해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6. 근무성적평정 과정상의 오류와 완화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관적 오류는 평정자의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거나 낮은 데서 비롯되며 강제배분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② 근접효과는 전체 기간의 실적을 같은 비중으로 평가하지 못할 때 발생하며 중요사건기록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③ 관대화 경향은 비공식집단적 유대 때문에 발생하며 평정결과의 공개를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④ 연쇄효과는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자주 발생하며 피평가자별이 아닌 평정요소별 평정을 완화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 정답 || ③

|| 해설 ||

- 바로잡기

- ③ 관대화 경향은 피평정자를 실제 수준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향으로서 비공식집단적 유대, 평정자와 피평정자의 친분관계 때문에 발생한다.

→ 관대화 경향은 평정 결과가 공개될 경우 인간관계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더욱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 해설

- ① 일관적 오류는 한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지속적으로 과대 또는 과소 평정하여 발생하는 오류이며, 분포상의 착오가 이에 해당한다.

→ 일관적 오류 또는 분포상의 착오는 상대평가 방식인 강제배분법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 ② 근접효과는 시간적 오류 중 최근 발생한 사건을 과대평가하여 발생하는 오류(막바지 효과)이다.

→ 근접효과의 방지를 위해서는 독립된 인사센터의 운영 · 결과에 의한 관리(MBO) · 중요사건기록법의 활용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 ④ 연쇄효과는 한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평가가 다른 요소의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로서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주로 발생한다.

→ 연쇄효과의 방지를 위해서는 강제선택법의 활용 · 각 평정요소별로 모든 피평정자를 순차적으로 진행 · 프로브스트식 체크리스트의 활용 · 한 페이지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가만을 진행하는 방법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2021년 3월 18일 DIET 행정학 6.0 국가직 Final 동형모의고사 - 제4회 14번

근무성적평정자가 평정도구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평정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쇄효과(halo effect)란 평정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가 성격이 다른 평정요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 ② 근접효과(recentry effect)는 평정대상 기간 중에서 평정시점에 가장 가까운 실적이나 사건일수록 평정에 더 크게 반영되는 경향이다.
- ③ 집중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강제배분법을 들 수 있다.
- ④ 근접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표식 평정척도법을 들 수 있다.

|| 정답 || ④

|| 해설 ||

- ④ 근접오류는 시간적 오류에 해당한다. 시간적 오류의 방지 수단으로 도표식 평정척도법은 활용되지 않는다.

→ 시간적 오류(첫머리 효과, 근접오류)의 방지를 위해서는 ㉠ 독립된 평가센터의 설치 · 운영, ㉡ 목표달성결과만으로 평가하는 MBO평정방식 사용, ㉢ 중요사건기록법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7. 테일러(Taylor)의 과학적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자는 생산증진을 통해서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해야 한다.
- ② 조직 내의 인간은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한다.
- ③ 업무와 인력의 적절한 결합은 노동자가 아닌 관리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 ④ 업무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동작연구와 시간연구를 사용한다.

|| 정답 || ②

|| 해설 ||

- 바로잡기

②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에서 조직 구성원을 합리적·경제적 인간으로 이해타산적인 존재로 전제된다.
→ 조직 내의 인간을 사회적 욕구에 의해 동기가 유발된다고 전제하는 것은 호손실험과 호손실험을 바탕으로 등장한 인간관계론의 관점에 해당한다.

- 해설

- ①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 도입은 조직의 입장에서 가장 능률적인 생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조직 구성원이 불만없이 직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관리방식을 찾기 위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이에 테일러는 조직 구성원을 합리적·경제적 인간으로 전제하고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경제적 욕구 충족을 통해 실현하는 동시에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설계하게 된다.
- ③ 테일러는 조직의 능률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생산 방식(One Best Way)이 있다고 전제하고, 관리자가 이를 발견하여 구성원에게 명확한 업무량과 작업방식을 제공해야 함을 주장한다.
- ④ 테일러는 업무수행에 있어 조직의 능률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 최선의 방법(One Best Way)을 찾기 위해 업무의 분업화와 동작연구와 시간연구를 사용한다.

2021년 1월 14일 DIET 행정학 5.0 진도별 문제풀이 - 제3회 13번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직 구성원을 경제적 유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타산적 존재로 인식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업무수행에 적용할 '유일 최선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직무를 분석하여 각 직무마다 표준화된 작업방법을 개발하고, 노동자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는 새로운 보수체계를 도입했다.
- ③ 테일러는 생산성과 임금에 있어 고용주와 종업원 간에 이견이 있다고 가정한다.
- ④ 동기부여의 가정과 방법면에서 현재의 성과관리제도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 정답 || ③

|| 해설 ||

- 바로잡기

③ 테일러는 고용주와 종업원 모두 합리적·경제적 인간으로서 개인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가정하고, 표준과업량의 부과와 이에 따른 보수 지급에 있어 견해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

- 해설

- ① 과학적 관리론 : 합리적·경제적 인간관을 전제로 조직의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유일 최선의 방법(One Best Way)'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직무를 분석하여 각 직무마다 표준화된 작업방법을 개발 → 표준과업량 제시 → 결과에 따른 차별적 성과급 지급 : 새로운 보수체계로서 성과급제도의 확립에 영향을 미침
- ④ 경제적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 : 현재의 성과관리제도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함

8.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뉴거버넌스가 상징하는 정부의 역할은 방향잡기(steering)이다.
- ②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공동체주의이다.
- ③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신뢰(trust)이다.
- ④ 뉴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시장(market)이다.

|| 정답 || ①

|| 해설 ||

- 바로잡기

② 신공공관리의 인식론적 기초는 신자유주의와 시장주의이다.

→ 뉴거버넌스는 공동체주의와 참여주의에 기초하여 시민의 참여를 강조한다.

③ 신공공관리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생산성(효율성)이며 이를 위해 경쟁과 갈등을 활용한다.

→ 뉴거버넌스가 중시하는 관리 가치는 신뢰(trust)이며, 다수의 행위자 간 협력적 국정운영을 추구한다.

④ 신공공관리론의 시장(market)이다.

→ 뉴거버넌스의 관리 기구는 네트워크(Network)이다.

- 해설

① 정부의 역할을 방향잡기(steering)로 인식하는 것은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공통점에 해당한다.

2021년 1월 21일 DIET 행정학 5.0 진도별 문제풀이 - 제5회 12번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신자유주의와 참여주의를 바탕으로 하며 정부의 역할을 노젓기(rowing)가 아닌 방향잡기(steering)로 인식한다.
- ② 관료의 역할을 공공기업가로 인식하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강조한다.
- ③ 대리인비용과 거래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책임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 ④ 시민참여를 통한 네트워크의 형성은 정책과정의 민주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책효율성을 어느 정도는 희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 정답 || ③

|| 해설 ||

- 바로잡기

③ 다양한 참여자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 대리인비용과 거래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확대는 책임확보의 어려움을 유발시킨다.

- 해설

①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와 시장주의, 신관리주의와 신제도주의 경제학을 배경으로 한다.

뉴거버넌스는 공동체주의와 참여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 신공공관리론은 뉴거버넌스의 배경이 되지만, 신자유주의는 신공공관리론의 배경만 된다.

② 신공공관리론은 관료의 역할을 공공기업가로 인식하고, 과정보다는 결과를 강조한다.

뉴거버넌스는 관료의 역할을 (네트워크의) 조정자로 인식하고, 결과보다 (정치적) 과정을 강조한다.

④ 시민참여를 통한 네트워크의 형성은 정책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부의 기능을 방향잡기(steering)로 한정하여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 민주성과 효율성의 동시 확보 : 뉴거버넌스, 전자정부의 도입

9. 로위(Lowi)의 정책유형과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고르면?

- ㉠ 규제정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의 정책으로 강제력이 특징이다.
 ㉡ 분배정책의 사례에는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정책 등이 있다.
 ㉢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 재분배정책의 사례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 등이 있다.
 ㉤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정답 || ②

|| 해설 ||

- 바로잡기

- ㉡ 분배정책은 정부가 특정 대상에게 각종 재화나 서비스·이익·지위·기회 등을 분배하는 작용을 의미한다.
 → 분배정책의 사례에는 FTA협정에 따른 농민피해 지원,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지원, 국공립학교 운영, SOC 건설 등이 해당한다.
 → (X)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정책 등은 재분배정책의 사례에 해당한다.
 ㉢ 재분배정책의 사례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누진소득세 제도 등이 해당한다.
 → (X) 대덕 연구개발 특구 지원은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로서 분배정책의 사례에 해당한다.

- 해설

- ㉠ 규제정책은 공공 목적의 달성을 위해 개인이나 일부 집단의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반사적으로 많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 국민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게 되기 때문에 법률의 형태를 취한다.
 → 규제정책에서 관료는 비용부담자와 편익수혜자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고서 강제력을 행사한다.
 ㉢ 재분배정책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으로서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계급대립적 성격을 지닌다.
 ㉤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과 선거구 조정 등과 같이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으로서 행정부 및 법원의 관할구역 설정, 선거구 획정 등이 해당한다.

2021년 3월 11일 DIET 행정학 6.0 국가직 Final 동형모의고사 - 제3회 6번

T.Lowi가 제시한 정책유형과 가장 관련 없는 내용은 무엇인가?

- ① 분배정책 - 국민에게 재화, 권리나 이익·서비스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정책 -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보조금 지급 정책
 ② 상징정책 - 정치체제가 정책에 대한 순응확보를 위해 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신뢰감을 증진시키는 활동 - 국경일의 제정
 ③ 재분배정책 - 기존의 권리·의무관계의 변경을 초래하는 정책 - 누진소득세, 실업수당 지급
 ④ 규제정책 - 개인이나 집단에 일정한 자유나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강제성을 가진 정책 - 가격담합 규제, 허위광고의 금지

|| 정답 || ㉔

|| 해설 ||

- 바로잡기

㉔ 상징정책에 대한 개념과 예시는 모두 옳은 문장이지만, 상징정책은 T.Lowi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Almond & Powell이 정책을 상징정책, 추출정책, 분배정책, 규제정책으로 구분하였다.

- 해설

T. Lowi는 1964년 논문을 통해 정책을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으로 구분하였으나, 1972년 논문을 통해 강제력의 행사방법과 강제력의 적용영역에 따라 기존의 세 가지 정책에 구성정책을 추가하여 4가지 정책유형을 제시하였다.

㉓ 분배정책 - 국민에게 재화, 권리나 이익·서비스를 산출하여 제공하는 정책 -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보조금 지급 정책

㉒ 재분배정책 - 기존의 권리·의무관계의 변경을 초래하는 정책 - 누진소득세, 실업수당 지급

㉑ 규제정책 - 개인이나 집단에게 일정한 자유나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강제성을 가진 정책 - 가격담합 규제, 허위광고의 금지

㉔ 구성정책 - 정부체제의 구조와 유지·운영에 관한 정책 - 정부기관의 설립 또는 개편

10.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킬 수 없다.
- ②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 모든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다.
- ④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를 정기회 개회 전까지 심의·의결을 완료해야 한다.

|| 정답 || ③

|| 해설 ||

- 바로잡기

- ③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특정 경비에 한하여”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는 준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준예산의 지출 가능 경비는 「헌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는 ㉠ 헌법 및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비, ㉡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에 한정된다.

- 해설

- 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② 기획재정부 예산실의 예산안 사정과정에서는 헌법상 독립기관(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 감사원 예산에 대해서도 사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때 독립기관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독립기관 예산 감액 시 국무회의에서 당해 기관장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
- 위 규정에 따라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④ 현행 「국가재정법」은 예산심사와 결산심사를 분리하고 있으며, 국회는 감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국가결산보고서가 5월 31일까지 제출되면 이에 대한 심의·의결을 국회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2021년 3월 4일 DIET 행정학 5.0 진도별 문제풀이 - 제19회 8번

예산불성립 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재정에서 거의 매년 활용되고 있다.
- ②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일관되게 준예산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 ③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잠정예산과 달리 가예산과 준예산은 국회의결 없이 집행된다.
- ④ 준예산은 헌법 및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비,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목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 정답 || ④

|| 해설 ||

- ①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준예산은 중앙정부 재정에서 실제 편성된 적이 없으며, 지방정부 재정에서 실제 편성된 적이 있다.

- ② 우리나라의 예산불성립 시 예산은 1공화국에서는 가예산 제도, 2공화국부터 현재까지 준예산 제도이다.

- ③ 국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잠정예산 및 가예산과 달리 준예산은 국회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준예산은 국무회의 의결로 집행된다.

11. 「국가공무원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부패행위 신고의무 ② 품위 유지의 의무
③ 복종의 의무 ④ 성실 의무

|| 정답 || ①

|| 해설 ||

① 부패행위 신고의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의무에 해당한다.

[Summary] 공무원의 법률상 의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① 선서의 의무	② 품위 유지 의무	③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④ 정치운동 금지	⑤ 집단행동의 금지	
	⑥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허가 필요		⑦ 성실의 의무
	⑧ 복종의 의무	⑨ 친절·공정의 의무	⑩ 비밀준수의 의무
	⑪ 청렴의 의무	⑫ 종교중립의 의무	⑬ 직장이탈 금지의 의무
공직자윤리법	①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 의무	② 퇴직공직자의 영리기업 등 취업 제한	
	③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제한의무	④ 재산공개 대상자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⑤ 선물신고 의무	⑥ 이해충돌방지 의무	
	⑦ 새로운 주식취득제한의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부패신고 의무 및 내부고발자 보호		
	②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③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의무		

DIET 행정학 4.0 기출 All care 2권 P. 209

14 상·중·하

2019 소방간부

「국가공무원법」 상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친절·공정의 의무 ②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
③ 종교중립의 의무 ④ 복종의 의무
⑤ 청렴의 의무

해설 ② 이해충돌방지의 의무는 「공직자윤리법」상 의무에 해당한다.

12. 예산주기에 비추어 볼 때 2021년도에 볼 수 없는 예산과정은?

- ① 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 작성
- ②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
- ③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
- ④ 감사원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보고서 작성

|| 정답 || ④

|| 해설 ||

- 바로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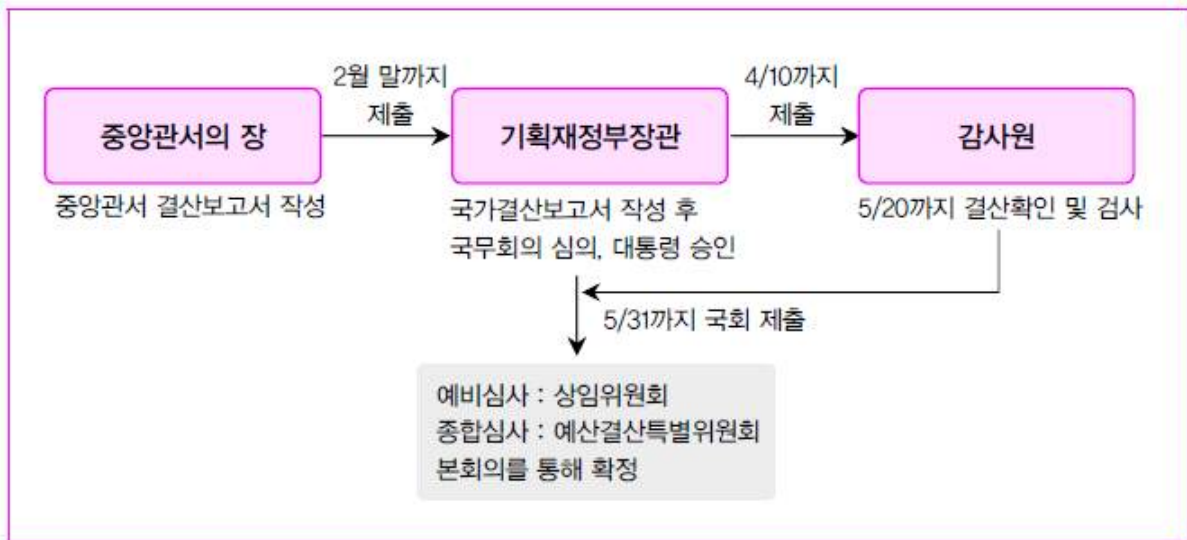
- ④ 2021 회계연도가 마감된 후 2022년도에 2021 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감사원은 2022년 4월 10일까지 2021 회계연도 예산 사용에 대한 국가 결산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에 대해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22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요구서는 2021년 5월 31일까지 작성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② 기획재정부의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배정은 2021 회계연도 중 예산집행을 위하여 이루어진다.
- ③ 2022년도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되면 대통령은 예산편성배경과 경제정책, 사회정책 전반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지를 표명하게 된다.

DIET 행정학 2.0 원리이해 2권 P. 333

2 결산과정



13.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않는 것은?

-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 ② 남북관계의 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경제협력, 해외원조를 위한 지출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답 || ④

|| 해설 ||

④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Summary]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가 발생한 경우
- ㉡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DIET 행정학 4.0 기출 All care 2권 P. 333

02   

2015 서울9급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의 방만한 운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89조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다음 중 위 법 조항에 명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부동산 경기 등 경기부양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 ③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해설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횟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지만 사유의 제한은 두고 있으며, ㉠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4.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부문의 자본이 부족한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② 시장에서 독점성이 나타나는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③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주식회사형 공기업은 특별법 혹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지만,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된다.

|| 정답 || ④

|| 해설 ||

- 바로잡기

- ④ 공기업 분류는 실정법상 분류(정부기업과 공공기관)와 이론상 분류(정부기업, 주식회사형 공기업, 공사형 공기업)로 구분된다.

→ 이론상 분류에 따를 때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인사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정부기업이다.

정부기업	「정부조직법」과 「정부기업예산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 인사, 예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음
주식회사형 공기업	정부가 일정부분 주식(50% 이상)을 소유한 기업
공사형 공기업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정부소유의 기업으로서 전액 정부출자에 의해 설립되는 기업

- 해설

- ① 공공수요가 있으나 민간부문의 자본으로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② 철도, 가스, 전기 등 자연독점화 될 수 있는 사업의 경우 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기업 설립이 정당화된다.
- ③ 정부가 공기업 설립을 통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사기업 질서에 반하여 사회주의적 간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ummary] 공기업 설립동기

Friedmann & Peterson	㉠ 자연독점적 사업의 통제 : 철도, 가스, 전기 등 자연독점 사업의 독점 폐해에 대한 우려 ㉡ 국방·전략상의 고려 및 경제적 위기의 극복 : 미국국물공사, 전시재정공사 등 ㉢ 사기업의 능력 부족 : 사기업의 위험 부담 감소 ㉣ 정치적 신조(이데올로기의 작용) : 영국 노동당 집권기 철도·전력 사업의 국유화
우리나라	㉠ 경제개발의 촉진 : 민간자본 부족, 위험 사업 등 ㉡ 공익사업의 통제 : 철도, 통신, 전력 등 ㉢ 공공수요의 충족 : 토지주택공사, 舊 주택은행 ㉣ 재정적 수요의 충족 : KT&G(舊 전매청) ㉤ 역사적 유산 : 일본인 소유 사업의 광복 후 공기업화(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DIET 행정학 2.0 원리이해 1권 P. 647

(2) 설립목적

① Friedmann과 Peterson의 공기업 설립 동기

- ㉠ 자연독점적 사업의 통제 : 철도, 가스, 전기 등 자연독점 사업의 독점 폐해에 대한 우려
- ㉡ 국방·전략상의 고려 및 경제적 위기의 극복 : 미국곡물공사, 전시재정공사 등
- ㉢ 사기업의 능력 부족 : 사기업의 위험 부담 감소
- ㉣ 정치적 신조(이데올로기의 작용) : 영국 노동당 집권기 철도·전력 사업의 국유화

② 우리나라의 공기업 설립 동기

- ㉠ 경제개발의 촉진 : 민간자본 부족, 위험 사업 등
- ㉡ 공익사업의 통제 : 철도, 통신, 전력 등
- ㉢ 공공수요의 충족 : 토지주택공사, 舊 주택은행
- ㉣ 재정적 수요의 충족 : KT&G(舊 전매청)
- ㉤ 역사적 유산 : 일본인 소유 사업의 광복 후 공기업화(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 공기업의 이론상 분류

- ① 정부기업 : 「정부조직법」과 「정부기업예산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조직, 인사, 예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음
- ② 주식회사형 공기업 : 정부가 일정부분 주식(50% 이상)을 소유한 기업
- ③ 공사형 공기업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정부소유의 기업으로서 전액 정부출자에 의해 설립되는 기업

15. 동기요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 ② 매클리랜드(McClelland)의 성취동기이론에 따르면 개인들의 욕구가 학습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 ③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은 특정 결과는 특정한 노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통상 주관적 확률로 표시 된다.
- ④ 엘더퍼(Aldefer)의 ERG이론에 따르면 상위 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수 있다.

|| 정답 || ①

|| 해설 ||

- 바로잡기

- ① 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조직 구성원은 조직으로부터의 처우를 다른 이의 처우와 비교하여 그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할 때 동기가 유발된다.

- 해설

- ② 매클리랜드(McClelland)는 성취동기이론을 통해 조직 구성원은 조직 활동을 경험하면서 학습을 통해 개인들의 욕구가 개발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 구성원의 욕구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며, 욕구의 개인차를 고려하지 못한 Maslow의 이론을 비판하였다.
- ③ 브룸(Vroom)의 기대이론에서 기대감은 노력이 성과(특정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 인식을 의미한다.
- ④ 엘더퍼(Aldefer)의 ERG이론에 따르면 상위 욕구 충족이 좌절되면 하위욕구를 다시 자극하는 방식으로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음(욕구의 하향적, 퇴행적 발로)을 인정하고 있다.

2021년 1월 28 DIET 행정학 5.0 진도별 문제풀이 - 제8회 5번

동기이론 중 아담스(J. S. Adams)의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성원은 자신이 조직으로부터 받은 처우를 다른 이의 처우와 비교하여 불공정성을 인식하는 경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행동의 동기가 유발됨을 설명한다.
- ② 조직으로부터 받은 처우란 구성원의 노력(투입)과 조직으로부터 받은 보상(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 ③ 구성원이 불공평성을 인식할 경우 자신의 목표를 상향 또는 하향조정하여 준거인과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 ④ 준거인물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비교대상을 보다 현실성 있는 인물로 교체함으로써 불공정을 시정하기도 한다.

|| 정답 || ③

|| 해설 ||

- ③ 아담스(Adams)의 공정성 이론에서 구성원은 조직으로부터의 처우가 다른 이의 처우와 비교하여 불공평함을 인식할 경우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동기부여가 이루어지는데, 목표 수준은 불공평성을 인식하는 상황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6. 정책평가와 관련하여 실험결과와 외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구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되는 경우
- ②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할 경우
- ③ 실험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일 경우
- ④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하는 경우

|| 정답 || ①

|| 해설 ||

- 바로잡기

- ① 연구자의 측정기준이나 측정도구가 변화되는 경우 :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 중 측정수단(도구)요인

- 해설

- ② 표본으로 선택된 집단의 대표성이 약할 경우 :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 중 표본의 비대표성
- ③ 실험집단 구성원 자신이 실험대상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른 특별한 반응을 보일 경우 :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 중 호손효과
- ④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만을 의도적으로 실험집단에 배정하는 경우 :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 중 선발과 실험처리의 상호작용

2021년 2월 25일 DIET 행정학 5.0 진도별 문제풀이 - 제18회 15번

정책평가의 외적 타당도 저해요인의 개념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선발과 실험처리의 상호 작용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동질성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이들 집단이 일반화하고자 하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는 경우
- ② 크리밍 효과 - 실험집단의 구성원이 실험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임에 따라 발생한 실험 처리 결과를 일반적인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 ③ 다수처리에 의한 간섭- 여러 번의 실험적 처리를 반복하는 경우 실험조작에 익숙해짐으로써 발생한 효과를 다른 집단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 ④ 호손 효과 - 실험 실시 전 사전측정(pre-test)을 실시하여 집단을 구성함에 따라 실험의 측정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 정답 || ③

|| 해설 ||

- ① 표본의 비대표성, ② 호손효과(실험조작의 반응효과), ④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2021년 2월 25일 DIET 행정학 5.0 진도별 문제풀이 - 제18회 14번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 저해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 ㉠ 역사효과 :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실험 전과 실험 후 상태의 차이를 정책효과로 잘못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 ㉡ 시험효과 : 실험집단의 구성에 있어 극단치가 포함되는 경우 그 효과는 재실험을 통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 ㉢ 상실효과 : 정책집행기간 중 대상 집단의 일부가 탈락해서, 남아 있는 대상이 처음과 다른 경우에 발생한다.
- ㉣ 도구효과 :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측정수단을 달리하거나, 정책 실시 전과 실시 후의 정책효과 측정수단이 다른 경우에 발생한다.
- ㉤ 오염효과 :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의 동질성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이들 집단이 일반화하고자 하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험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제약된다.

17.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 ②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 ③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다.
- ④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 정답 || ④

|| 해설 ||

- 바로잡기

- ④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군수를 소환하려고 할 경우에는 해당 군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한다.

- 해설

- ① 주민소환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하여 주민 투표를 통해 임기 만료 전 해직을 결정하는 제도로서 가장 유력한 직접민주주의 제도이다.
- ② 주민소환의 대상은 선출직 지방공직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장, 지방의회 의원(단, 비례대표 의원 제외), 교육감이 해당한다. 즉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이 아니다.
- ③ 주민소환은 공직자의 책임성 확보 수단으로서 헌법·법률 위반만이 아닌 정치적 무능이나 공약불이행 등을 원인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심리적 통제 효과가 크게 작용한다.

2021년 3월 6일 DIET 행정학 5.0 진도별 문제풀이 - 제22회 10번

10.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주민소환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하게 되며, 그로 인해 실시하는 해당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위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연서를 확보해야 한다.

|| 정답 || ④

|| 해설 ||

- ④ 주민소환투표의 실시 청구를 위해서는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연서를 확보해야 한다.
→ 시장·군수·자치구의 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위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의 연서를 확보해야 한다.

18. 신공공서비스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
- ② 공익은 개인적 이익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확립해야 한다.
- ③ 책임성이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관료들은 헌법, 법률, 정치적 규범, 공동체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④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조직은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되어야 한다.

|| 정답 || ②

|| 해설 ||

- 바로잡기

②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공익은 시민참여에 의한 담론의 결과로 인식된다.

→ 공익을 개인적 이익의 집합으로 인식하는 것은 시장의 논리(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 사회총효용)로서 신공공관리론의 공익 관점에 해당한다.

- 해설

① 신공공서비스론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민에 대한 봉사(Service)여야 한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관료의 책임확보는 헌법, 법률, 정치적 규범, 공동체의 가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확보되어야 한다.

④ 신공공서비스론은 생산성보다는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인간존중을 추구하며, 공공조직은 시민참여가 가능하도록 공유된 리더십과 협력의 과정을 통해 작동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2021년 1월 21일 DIET 행정학 5.0 진도별 문제풀이 - 제6회 4번

전통적 정부,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비교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전통적 관료제는 개괄적 합리성을, 신공공관리론은 경제적 합리성을, 신공공서비스론은 전략적 합리성을 추구한다.
- ② 신공공관리론에서 관료의 반응 대상이 고객이라면, 신공공서비스론에서 관료의 반응대상은 시민이다.
- ③ 신공공관리론의 공익이 개인들의 총이익이라면, 신공공서비스론의 공익은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이다.
- ④ 신공공관리론의 조직구조가 상명하복의 관료제적 조직구조라면, 신공공서비스론의 조직구조는 기본적 통제만을 수행하는 분권화된 공조직이다.

|| 정답 || ④

|| 해설 ||

- ④ 전통적 관료제의 조직구조가 상명하복의 관료제적 조직구조라면, 신공공관리론의 조직구조는 기본적 통제만을 수행하는 분권화된 공조직, 신공공서비스론의 조직구조는 조직 내외적으로 공유된 리더십을 갖는 협동적 구조이다.

19. 공공사업의 경제성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할인율이 높을 때는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투자 사업보다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투자사업이 유리하다.
 ㉡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반영하고,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비용과 편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 순현재가치(NPV)는 비용의 총현재가치에서 편익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며 0보다 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알지 못해도 사업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분석기법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 정답 || ②

|| 해설 ||

- 바로잡기

- ㉡ (X)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편익의 경우 직접적, 간접적, 유형적, 무형적 편익을 모두 포함하되, 화폐적(금전적) 편익만 편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X) 순현재가치(NPV)는 “편익”의 총현재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며,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 경우 편익의 가치가 비용의 가치보다 크게 발생함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 해설

- ㉠ 할인율이 높을 때는 장기적인 가치의 현재가치가 할인율의 영향으로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편익이 장기간에 실현되는 장기투자 사업의 경우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의 가치가 할인율에 의해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편익이 단기간에 실현되는 단기투자사업보다 불리해지게 된다.
 ㉣ 정책도입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사회적 할인율을 알고 있을 때 순현재가치법, 편익비용비(수익률지수)를 활용하며, 사회적 할인율을 구할 수 없을 때 내부수익률법과 회수기간법을 사용한다.

2021년 2월 25일 DIET 행정학 5.0 진도별 문제풀이 - 제16회 11번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며 비용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편익은 유형적·무형적·직접적·간접적 편익을 모두 포함하되 금전적 편익은 제외한다.
 ② 공공정책의 경우 비용에 비해 편익이 장기적으로 나타나므로 높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내부수익률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순현재가치에 의한 사업의 우선순위와 다를 수 있다.
 ④ 비용편익분석은 사업대안의 경제적 효율성 분석은 가능하지만, 형평성과 민주성의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진다.

|| 정답 || ②

|| 해설 ||

- 바로잡기

- ② 사회적 할인율이 높을 경우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였을 경우 현재가치가 낮게 나타나게 된다.
 → 공공정책의 경우 비용에 비해 편익이 장기적으로 나타나므로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이 할인율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
 → 결과적으로 높은 할인율의 적용은 현재가치로 환산한 편익의 현재가치가 작아지게 되며, 비용의

현재가치에 비해 낮은 값을 가질 수 있다. 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에 비해 낮게 측정되는 경우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져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진다.

→ 이에 공공부문에서는 민간부문에 비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민간 할인율과 구분되는 사회적 할인율을 도출하여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에 적용하게 된다.

- 해설

① 비용과 편익을 모두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며 비용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 편익은 유형적·무형적·직접적·간접적 편익을 모두 포함하되 금전적(화폐적) 편익은 제외한다.

→ 편익의 발생기간은 물리적 수명이 아닌 경제적 수명으로 측정한다.

③ 할인율을 알지 못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편익과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비용의 가치가 같아지는 임의의 상황에서 도출한 내부수익률에 의한 정책대안의 우선순위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정책대안의 실현으로 인해 확보하게 될 총편익과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도출하여 정책대안을 비교하는 순현재가치법에 의한 우선순위와 다를 수 있다.

④ 비용편익분석은 계량적 비교를 통해 사업대안의 경제적 효율성 분석은 가능하지만, 형평성과 민주성과 같은 공공부문의 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진다.

20. 공공봉사동기이론(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사부문 간 업무성격이 다르듯이, 공공부문의 직원들은 동기구조 자체도 다르다는 입장에 있다.

② 정책에 대한 호감, 공공에 대한 봉사, 동정심(compassion) 등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④ 페리와 와이스(Perry & Wise)는 제도적 차원, 금전적 차원, 감성적 차원을 제시하였다.

|| 정답 || ④

|| 해설 ||

- 바로잡기

④ 페리와 와이스(Perry & Wise)가 주장한 공공봉사동기는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감성적(정서적) 차원으로 유형화된다.

- 해설

① 공공봉사동기는 공직 동기란 지역공동체, 국민, 국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일반적인 이타적 동기 혹은 보다 헌신적이며 열정적으로 그리고 자기희생적인 방법을 통해 공익 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동기를 의미한다.

→ 공공봉사동기는 “공공부문 종사자와 민간부문 종사자는 각기 다른 동기를 갖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성과와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성과급·외재적 보상과 같은 외재적 동기 유발요인에 초점을 맞춘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반발로서 제기되었다.

② 정책에 대한 호감은 합리적 차원, 공공에 대한 봉사는 규범적 차원, 동정심(compassion)은 정서적(감정적) 차원의 공공봉사동기에 해당한다.

③ 공공봉사동기이론에 따를 때 공공조직에서 공공봉사동기는 조직의 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인식되며, 이는 공공봉사동기가 높은 사람을 공직에 충원해야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021년 1월 28 DIET 행정학 5.0 진도별 문제풀이 - 제9회 10번

공직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은 민간부문 종사자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 ② 공공조직 구성원은 경제적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라 가정한다.
- ③ 공공부문에 종사하기 이전 성장과정에서 공익을 위한 이타적 성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 ④ 공무원 입직 이후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공직봉사동기의 내재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 정답 || ②

|| 해설 ||

- 바로잡기

- ② 경제적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를 추구하는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반발로서 공직봉사동기 이론은 민간기업에 비해서 공공조직에서는 경제적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가 잘 작동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다.

- 해설

- ① 공직서비스동기는 “공공부문 종사자와 민간부문 종사자는 각기 다른 동기를 갖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 ③ 공직봉사동기 이론에 따를 경우 공공부문에 종사하기 이전 성장과정에서 공익을 위한 이타적 성향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며, 공직봉사동기는 조직 구성원이 되기 이전부터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형성되는 개인의 기본적 경향으로 이해된다.
- 공직봉사동기 이론에 따를 경우 개인의 공직동기 수준이 높다면 공공조직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 ④ 공직봉사동기 이론에 따를 경우 공무원 입직 이후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조직구성원의 공직봉사동기의 내재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Summary] 공공(공직)서비스 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

의의	① 공직 동기란 지역공동체, 국민, 국가,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는 일반적인 이타적 동기 혹은 보다 헌신적이며 열정적으로 그리고 자기희생적인 방법을 통해 공익 증진을 위하여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동기를 의미함 ② 공직동기는 공공부문에서 주요하게, 고유하게 나타나는 동기에 반응하는 개인적 경향으로서, 조직 구성원이 되기 이전부터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형성되는 개인의 기본적 경향으로 이해됨
대두배경	① “공공부문 종사자와 민간부문 종사자는 각기 다른 동기를 갖는다.”는 가정에서 출발함 ②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성과와 경쟁을 중심으로 하는 성과급·외재적 보상과 같은 외재적 동기 유발요인에 초점을 맞춘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반발로서 제기됨 ③ 공공서비스동기이론은 관료의 새로운 역할을 봉사(Service)로 인식하고, 관료의 동기유발을 봉사정신에서 찾는 신공공서비스론에 영향을 미침
특성	① 개인의 공직동기 수준이 높다면 공공조직의 구성원이 되고자 하는 가능성이 큼 ② 공공조직에서 공직동기는 성과와 정(+)의 관계를 가짐 ③ 높은 수준의 공직동기를 갖고 있는 구성원을 보유한 공공조직은 개인의 성과를 다루는 데 있어 물질적 보상(공리주의적 인센티브)에 보다 적게 의존하게 됨

유형	- 합리적 차원 ① 합리적 차원의 공직동기는 “공공정책 결정에 대한 호감도”를 의미함 ② 공공조직 구성원은 타인과 국가를 위한 이타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함 ③ 다만 개인의 사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조직의 구성원과 달리 공공조직 구성원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행위가 개인의 효용을 구성함 ④ 결과적으로 공직동기에 있어 합리적 차원의 동기는 정책과정의 참여, 소수자의 보호 등을 통해 사회 문제가 해결되어 사회적 고통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 자신에 대한 만족감·자긍심과 같은 개인적 효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함
	- 규범적 차원 ① 규범적 차원의 공직동기는 “공익에 대한 몰입”을 의미함 ② 공익에 대한 몰입은 공익에 대한 봉사욕구, 정부에 대한 충성심, 사회적 형평의 추구 등을 포함함
	- 정서적(감성적) 차원 ① 정서적 차원의 공직동기는 “동정심과 희생정신”을 의미함 ② 동정과 희생은 정책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진실된 신념으로부터 기인한 정책에 대한 몰입과 선의의 애국심을 포함함 ③ 선의의 애국심이란 타인에 대한 사랑과 희생에 기초한 정서적 차원의 동기에 해당하며, ‘국가 내에 존재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사랑과 그들에게 부여된 모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함